

그리스의 계급투쟁

류주형 |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임월산 |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국제국장

지난 5월 6일 그리스 총선에서 유럽연합(EU)-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기금(IMF) ‘트로이카’와 그리스 정부의 구제금융-긴축재정 정책을 비판한 좌파 정당 급진좌파연합(SYRIZA, 이하 ‘시리자’)이 2위를 차지했다. 지난 2년간 구제금융-긴축정책의 악순환에 대한 대중적 반발이 반영된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트로이카와 그리스 지배계급은 시리자가 집권할 경우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그리스 민중들의 공포를 자극하고 있다. 반대로 시리자는 유로존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긴축안 재협상을 주장한다. 현재 양당 지지율은 백중세다.

현재 그리스의 계급투쟁은 ‘민주주의의 결핍’으로 특징지어지는 신자유주의적 유럽 통합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또한 유럽 위기의 폭발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적으로 표상한다. 유럽은 은행위기, 재정위기를 거쳐 정치위기와 제도위기 단계로 진입 중이다. 2007-09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후속하는 유럽의 위기는 세계경제에 짙은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이 보고서는 오늘날 유럽의 위기와 계급투쟁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다. 우선 지난 2년간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위기의 원인과 경과를 분석한다. 이어서 그리스 1차 총선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그리스 좌파의 상태를 검토한다. 2차 총선에서 그리스의 여러 정치 세력이 제출하고 있는 대안을 살핀다. 아울러 최근 트로이카의 유럽 위기 해법을 평가하면서 향후 유럽 위기를 전망한다. 끝으로 그리스의 계급투쟁으로부터 사회운동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 목 차 -

1. 문제제기
2.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
3. 유럽의 재정위기 대응의 문제점
4. 2012년 5월 6일 그리스 총선: 결과와 의미
5. 그리스 좌파와 시리자의 역사
6. 시리자가 선거에서 선전한 배경
7. 그리스의 급진적 좌파 세력들의 입장
8. 최근 거론되는 위기 대책 검토
9. 시사점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회

1. 문제제기

- 지난 5월 6일 그리스 총선에서 유럽연합(EU)-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기금(IMF) '트로이카'와 그리스 정부의 구제금융-긴축재정 정책을 비판한 좌파 정당 급진좌파연합(SYRIZA, 이하 '시리자')이 2위를 차지. 지난 2년간 구제금융-긴축정책의 악순환에 대한 대중적 반발이 반영된 결과
- 긴축에 찬성하는 1당 신민당이나 반대하는 2당 시리자 모두 과반 의석에 미달하고 연정 구성에도 실패한 결과 그리스는 6월 17일 2차 총선을 앞두고 있음. 이미 작년부터 '사실상의 디폴트' 상태에 처한 그리스는 무정부 상태에 빠지면서 뱅크런이 가속화하는 등 위기가 더욱 심화하는 양상
- 동시에 유로존의 위기는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확산되고 있음. 6월 9일에는 그리스(2010.5), 아일랜드(2010.11), 포르투갈(2011.4)에 이어 네 번째로 스페인에 1,000억 유로 규모의 은행 구제금융안이 결정. 14일에는 사상 최초로 스페인 국채(10년물) 금리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7%를 돌파하기도
- 이런 상황에서 트로이카와 그리스 지배계급은 시리자가 집권할 경우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그리스 민중들의 공포를 자극. 반대로 시리자는 유로존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긴축안 재협상을 주장. 현재 양당 지지율은 백중세
- 트로이카는 그리스의 '무질서한 디폴트' 또는 '그렉시트'가 끼칠 충격과 스페인·이탈리아로 위기가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해법을 모색 중. 그러나 이 해법들은 '재정동맹 없는 화폐동맹'이라는 유로존의 구조적 제약과 상이한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를 지닌 각국의 이견으로 실행가능성이 지극히 낮음
- 트로이카와 그리스 지배계급은 이미 부과된 긴축조치들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면서 상황을 유지, 관리하는 기술관료적 해법을 반복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유로존의 구조적 결함을 해결할 경제적 해법이 부재한 가운데, 취약국의 정치적·사회적 실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상유지식 대책은 조만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음
- 현재 그리스의 계급투쟁은 '민주주의의 결핍'으로 특징지어지는 신자유주의적 유럽 통합에 대한 중대한 도전. 또한 유럽 위기의 폭발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적으로 표상. 유럽은 은행위기, 재정위기를 거쳐 정치위기와 제도위기 단계로 진입. 2007-09년 미국 발 금융위기에 후속하는 유럽의 위기는 세계경제에 짙은 암운을 드리우고 있어
- 이에 오늘날 유럽의 위기와 계급투쟁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함. 우선 지난 2년간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위기의 원인과 경과를 분석. 이어서 그리스 1차 총선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그리스 좌파의 상태를 검토. 2차 총선에서 그리스의 여러 정치 세력이 제출하고 있는 대안을 살펴봄. 아울러 최근 트로이카의 유럽 위기 해법을 평가하면서 향후 유럽 위기를 전망. 끝으로 그리스의 계급투쟁으로부터 사회운동의 시사점을 도출함

2.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

1) 구조적 원인

□ 유럽 통합의 신자유주의적 본질

○ 유럽 통합 1단계: 전후 재건과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 유럽 통합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으로 소급. 전후 재건과정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갈등을 감축함으로써 전쟁을 예방하려고 한 미국의 의도에 따라 유럽석탄철강공동체(ESCS)가 설립된 것이 그 시초
- 유럽 통합의 새로운 국면은 1960년대 후반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함께 시작. 브레튼우즈 체제의 해체 이후 환율변동에 경제에 미치는 파괴적 효과가 지속되자 안정적 화폐 공급과 금융에 대한 탈규제를 통해 위기를 관리하고자 하는 통화주의가 힘을 얻게 됨. 그 결과 유럽화폐제도(EMS)가 도입

연도	조약명	내용
1952	유럽석탄철강공동체(ESCS) 설립조약	유럽석탄철강공동체(ESCS) 설립
1958	유럽경제공동체(EEC) 및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설립조약(로마 조약)	유럽경제공동체(EEC) 설립 유럽원자력공동체 설립
1967	유럽통합조약(Merger Treaty)	유럽공동체(EC)로 통합
1978	유럽화폐제도(EMS)	회원국간 환율 고정
1987	유럽단일의정서(Single European Act)	로마조약 개정, 경제정책 수렴기준 삽입
1993	유럽연합(EU)조약(마스트리히트 조약)	유럽연합 출범
1999	암스테르담 조약	유로화 출범
2003	니스 조약	유럽헌법조약 초안 제출
2009	리스본 조약	리스본 조약('미니 헌법') 발효

<표> 유럽 통합 조약 및 공동체 설립 연혁

○ 유럽 통합 2단계: 냉전 해체와 독일 통일

- 유럽연합의 출범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유럽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지역화 전략
- 냉전 해체와 독일 통일 이후 신자유주의적 유럽 통합이 본격화. 결국 독일 헤게모니*를 인정한 독일-프랑스간 합의를 바탕으로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되고 1993년 유럽연합이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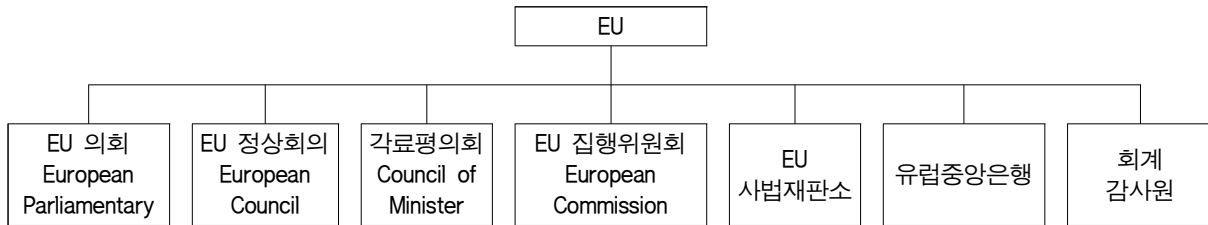
* 원래 프랑스는 유럽 통합을 강화함으로써 통일독일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견제하고자 한 반면, 독일은 독일연방은행의 통화주의를 유럽 차원으로 확대하고 마르크를 단일화폐인 유로로 부상시킴으로써 경제적 헤게모니를 강화하고자 시도

- 동시에 냉전 해체 이후 유럽 내에서 활동하는 초민족적 자본이 유럽 정치의 핵심적 행위자로 등장. 예컨대 유럽산업가원탁회의나 유럽금융가원탁회의 같은 유럽 차원의 자본가들의 조정기관이 확립
- 이런 사정을 반영하여 2003년 작성된 유럽헌법조약 초안은 유럽의 신자유주의적 경제·화폐 동맹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 헌법조약은 유럽연합의 시민권을 회원국의 국적자로 정의함으로써 이민자를 시민권으로부터 배제한 것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를 인정함으로써 유럽의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배를 보장
- 그러나 유럽헌법조약은 2005년 프랑스,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부결. 2007년 리스본 정상회의에서 헌법조약 수정 초안이 제출되고, 2009년 '미니 헌법'의 형태로 발효

	일자	추진 경과
EU 헌법조약 추진	2003. 6. 20	유럽 헌법조약 초안 제출
	10. 4	정부간 회의(Intergovernmental Conference) 출범
	12. 13	IGC, 브뤼셀 정상회의에서 폴란드와 스페인의 의사결정방식 반대로 결렬
	2004. 6. 18	아일랜드, EU 대통령 정치적 합의 도출
	10. 29	EU 정상, 로마에서 헌법조약안에 서명
	2005. 2. 20	스페인, 국민투표 찬성
	5. 29	프랑스, 국민투표 부결
	6. 1	네덜란드, 국민투표 부결
리스본 조약	6. 16	EU, 숙려기간 요청
	2007. 6. 21	EU, IGC에 수정 조약 관련 권한 위임
	10. 5	수정 조약 초안 제출
	12. 13	EU 정상, 리스본에서 조약 서명
	2008. 6. 12	아일랜드, 국민투표 부결
	2009. 10. 2	아일랜드, 국민투표 통과
	2009. 12. 1	리스본조약 발효

<표> 리스본 조약 추진 경과

□ 재정동맹 없는 화폐동맹



<표> 유럽연합의 제도적 구조

○ 유로화 단일통화체제에서 회원국은 통화주권을 상실

- 화폐동맹은 민족화폐를 공동통화로 대체하면서 통화주권을 포기하는 통화대체(currency substitution)의 일종
- 화폐통합은 유럽 단일시장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 그렇지 않다면 개별 국가가 평가절하를 통해 자국 상품의 시장경쟁력을 높이는 보호주의적 전략을 취할 수 있기 때문
- 화폐동맹에 따라 개별 국가의 환율조정 가능성은 완전히 폐기. 이로써 기술력과 생산력이 열세인 국가가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신축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됨

○ 반면 화폐동맹에 상응하는 재정동맹은 이루어지지 않음

- 화폐정책에 비해 재정정책은 민족국가의 주권적 성격이 강한데다 조세제도, 재정지출 등은 국내 정치적 측면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이라는 이유
- 그 결과 확장적 거시정책 수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고수할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어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메커니즘 확립

○ 화폐동맹의 전제조건은 모든 나라의 재정적 건전성이 확보되는 것

- 유로를 단일화폐로 채택하기 위해 체결된 마스트리히트조약(1992년)은 경제정책 수렴기준*을 제시

* 대표적으로, ▲정부의 연간 재정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국가채무는 GDP의 60% 이내로

한정

- 따라서 개별 국가가 적자재정 정책을 시행하려면 금융시장에 의존해야 함. 개별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의 이자율이나 신용등급은 금융시장에 의해 결정됨

- 유럽중앙은행은 '물가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요체로 하는 신보수주의적 통화주의를 고수함
 - 사실상 독일연방은행의 확대판인 유럽중앙은행은 통화정책에 관한 한 여론 및 회원국의 압력이나 제도적 견제 없이 절대적 주권을 행사하는 진정한 초민족적 기술관료 기구
 - EU 조약에 의하면 유럽중앙은행은 회원국가의 부채를 관리할 의무가 없음. 이는 회원국가의 국채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표현됨

○ 결과적으로 유럽적 연방주의는 실현되지 못함

- 유럽연합은 미국의 연방정부와 같은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함. 이런 점에서 유럽연합 제도는 '민주주의의 결핍'으로 특징지어짐

* 유럽연합의 최고 의결기구는 회원국 정상회의인 유럽연합 정상회의(The European Council). 유럽 차원의 법률 제정은 회원국의 장관급 각료로 구성된 각료평의회(The Council of Minister)가 주로 담당. 유럽연합 의회는 민족국가의 의회와 달리 입법권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자문과 감사가 주된 역할

- 유럽연합 회원국가는 단일한 화폐를 공유하지만 재정을 공유하지는 않음. 단적으로, 미국의 재무부 같은 기구는 존재하지 않음. 즉 통일된 재정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정치적 동맹이 아님
- 그 결과 유럽연합은 직접적 과세의 권한을 갖지 못함. 사실 조세권이 없는 주권은 성립할 수 없음. 각국의 사회정책은 개별국가의 책임으로 남음. 유럽적 차원의 사회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는 없음

○ 뿐만 아니라 화폐동맹 자체도 취약함

- 유럽중앙은행은 유럽의 은행들에 대한 단일한 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또 유럽연합에는 미국처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같은 기구도 존재하지 않음

□ 유럽의 내부적 불균형

○ 독일은 유럽 통합의 이점을 활용해 '증상주의적 제국주의' 방식의 경제성장을 구가

- 통일 이후 거시경제적 조건이 악화되고 있던 독일은 유럽 통합을 계기로 하르츠 노동개혁 등 노동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상승시키려는 전략을 취함. 그 결과 2000년대 이후 독일의 단위노동비용은 거의 상승하지 않음

* '경쟁력 확보를 위한 코퍼러티즘': 2000년대 연평균 13.1%의 수출증가율, -0.5%의 실질임금 상승률

- 더 중요한 것은 독일이 마르크를 유로로 대체하면서 사실상 상당한 평가절하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

* 수출경쟁력이 낮은 주변국들은 실질실효환율이 고평가되어 무역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된 반면, 수출경쟁력이 높은 중심국들은 실질실효환율이 저평가되어 무역흑자가 지속적으로 누적

- 그 결과 2000년대 이후 독일은 역내 상품수출과 자본수출을 통해 막대한 흑자*를 누적

* 독일은 중국, 일본과 더불어 세계 최대의 무역흑자 국가. 그러나 중국, 일본과 달리 독일의 수출시장의 대부분

분은 유럽 역내에 위치

- 결과적으로 통일 이후 1990년대 장기 침체를 겪었던 독일 경제는 유럽 통합 이후 2000년대 경제성장을 구가함

○ 반면 그리스와 같은 주변국들은 수출경쟁력을 상실

- 평가절하 전략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격차를 상쇄할 경제적 메커니즘이 소멸. 게다가 단위노동비용이 꾸준히 상승
- 이러한 중심부에서의 흑자 누적과 주변부에서의 적자 누적 메커니즘이 유럽의 내부적 불균형의 기초를 이룸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럽 국가들에게 유로화는 현대화의 자극제로 인식됨

- 화폐통합의 결과, 주변부 국제 금리는 독일 수준으로 감소. 또 국외의 저축이 유입되면서 민간부채와 정부부채가 증가. 주변국들은 이러한 자본수입(대외부채)의 증가에 힘입어 중심국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을 시현
-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불안정하고 취약한 공생. 주변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자본수지 흑자는 쌍을 이루는 현상
- 반대로 독일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자본수출로 전환. 즉 유럽 내부에서 '수출 유로의 환류' 메커니즘

2) 정세적 원인

□ 2007-09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

○ 2007-09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유럽도 금융위기를 경험

- 미국 금융위기로 미국 금융시장에 투자된 유럽계 금융기관의 자산 가치 하락
- 2008년 이후 유럽 금융위기가 단계적*으로 고조

* 2008년 아일랜드에서 최초로 은행위기가 가시화된 이후 영국 로던록의 뱅크런 사태,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정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포트리스의 파산, 독일의 히포레알부동산 준국유화 등이 발생. 2011년에는 유럽은행감독청(EBA)가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높은 점수로 통과한 텍시아가 파산하기도

○ 금융위기의 여파는 실물경제 위기로 확산

- 2008년 이후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
- 그 결과 독일을 제외한 유럽 각국의 실업률은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

	2008	2009	2010	2011	2012	
					1월	2월
유로지역	7.6	9.6	10.1	10.2	10.8	10.8
독 일	7.5	7.8	7.1	5.9	5.7	5.7
프 랑 스	7.8	9.5	9.8	9.7	10.0	10.0
이탈리아	6.7	7.8	8.4	8.4	9.1	9.3
스 페 인	11.3	18.0	20.1	21.7	23.3	23.6
그 리 스	7.7	9.5	12.6	17.7

아일랜드	6.3	11.9	13.7	14.4	14.7	14.7
포르투갈	8.5	10.6	12.0	12.9	14.8	15.0

<표> 유로지역 주요 국가들의 실업률 추이. 출처: EUROSTAT

○ 적자재정과 국가채무의 누적

- 1990년대 이후 지속된 감세로 유럽 각국의 조세수입 기반이 악화된 상태에서 미국발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공공지출이 늘어나며 재정수지가 급속히 악화
- 2009년 이후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주변국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신용등급 하락, 자금조달 비용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며 재정위기가 초래
- 한편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신용부도스왑(CDS)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CDS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이를 보유한 투자자는 금융시장에서 패닉 상태를 조장하기도

<참고> 국가채무 비율 비교: 남유럽 대 미국, 일본

-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 2009-11년 연평균)은 스페인·이탈리아·그리스·포르투갈 남유럽 4개국(104.4%)이 미국(97.1%)보다 약간 높고 일본(218.4)의 절반 수준을 하회
- 최근 5년간 국가채무 비율의 추이를 보면 일본(43.8%p), 미국(36.3%p)이 남유럽 4개국(35.1%p)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
- 재정적자 비율(GDP 대비, 2009-11년 연평균)도 남유럽 4개국(8.5%)이 미국(11.0%) 및 일본(9.9%)보다 낮은 수준
- 최근 5년간 재정적자 비율의 상승폭도 남유럽 4개국(3.6%)이 미국(7.5%)과 일본(6.4%)보다 작게 나타남
- 물론 최근 들어 미국과 일본도 재정위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지만,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에서 국가재정의 위험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평가를 받고 있음.
- 기본적으로, 국민소득의 성장률보다 국가채무 성장률이 높을 경우 재정위기 가능성이 높아짐
- 그밖에 주요한 이유는 남유럽국가의 경우 ①전체 국가채무와 달리 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고 ②유로화 단일통화체제에 속해 있어 정책대응 면에서 큰 제약을 받기 때문
 - ▷ 미국은 남유럽국가보다 GDP 대비 대외채무 규모가 작은데다 기축통화국으로서 외채보유에 따른 리스크도 작음(달러화표시 채무의 상황이 용이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채무부담 증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
 - ▷ 일본의 경우 국내 대규모 여유자금이 주로 자국 국채시장에 유입됨으로써 국외에서의 자금조달 비중이 여타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음
 - ▷ 대외채무가 낮은 국가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경우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탈리아(-2.9%, GDP 대비, 2009-11년 평균), 그리스(-10.2%), 포르투갈(-9.1%), 스페인(-4.5%) 등은 최근까지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
 - ▷ 또한 유럽의 위기관리기구(EFSF)는 회원국의 만장일치제로 운영되어 의사결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 무엇보다 유럽연합(EU) 조약상 유럽중앙은행이 직접적인 구제금융을 제공할 수 없어 최종대부자 기능을 통해 금융안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도 구조적인 제약이 있음

○ 은행위기의 국가채무위기로의 전환

- 주변국 정부들은 자국의 민간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 이런 점에서 유럽의 재정위기는 은행위기가 국가채무위기로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유럽에서는 정부가 은행주식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역으로 은행들은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는 관행이 발달함. 유럽의 은행들에 대한 감독과 지원은 유럽 차원이 아니라 민족적 수준에서 이루어짐. 즉 유럽 은행에 대한 구제는 유럽연합이나 유럽중앙은행이 아니라 각국 정부의 몫

- 국가채무위기는 다시 자국의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은행의 재무구조를 악화. 일종의 악순환*

* 정부가 채무조정을 한다면 은행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것이며, 역으로 은행의 신주발행을 통한 자본확충은 정

부의 대규모 구매를 낳아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음

- 민간의 부채가 국가의 부채로 이전되고, 민간의 부실이 국가재정의 부실로 전환되는 ‘손실의 사회화’ 메커니즘의 결과 국가채무위기가 발생

3. 유럽의 재정위기 대응의 문제점

1) 개요

- 2009년 7월 유럽연합 회원국인 헝가리에서 재정위기가 발생. 2010년 3월에는 유로존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발생. 같은 해 10월에 아일랜드가, 2011년 4월에 포르투갈이 재정위기에 봉착
- 2011년 5월 그리스의 디폴트 위험이 재차 고조되고 7월부터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재정위기 가능성이 부각
- 2011년 하반기 유럽연합과 유로 기구들은 그리스 채무조정, 위기관리기구(EFSF) 규모 및 기능 확대, 유럽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확대(LTRO) 등의 조치를 추가로 도입
- 그러나 2012년 들어 그리스·아일랜드·포르투갈 등 위기국의 디폴트 위험이 다시 제기되고, 스페인·이탈리아로의 위기 전염 가능성도 높아짐. 결국 5월 그리스 총선 이후 그리스·스페인에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고 6월에는 스페인이 1,000억 유로의 은행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결정
- 유럽의 재정위기는 유럽 통합의 신자유주의적 본질, 즉 ‘재정동맹 없는 화폐동맹’ 및 ‘유럽의 내부적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요인과 함께,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 즉 은행위기 비용의 국가채무 누증으로의 전환이라는 정세적 요인이 중첩되어 표현된 결과
- 그러나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트로이카’는 재정위기의 본질적 원인을 개혁하기보다는 현상적 문제점에 대처하는 데 급급한 결과, 구제금융과 긴축재정의 악순환을 초래

2009년 10월	그리스 사회당 신정부 2009년 예상 재정적자 변경 발표(중전 6%에서 12.7%로)
2009년 12월	그리스 국채 신용등급 하향 조정
2010년 2월	유럽 주요국 정상들 그리스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한 원칙적 입장 제시
2010년 3월 3일	그리스 정부 재정긴축안 발표, 유럽의 연대와 IMF의 지원 요청
2010년 3월 15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양자간 대출지원 방식에 관한 의견 교환
2010년 4월 11일	유럽재무장관회의, 300억 유로 대출(5% 이자율)과 IMF 150억 유로 지원 방안 비공식 타진
2010년 4월 21일	EU, ECB, IMF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조건으로 긴축재정안 협상
2010년 4월 23일	그리스 정부, 구제금융 공식 요청
2010년 5월	EU와 IMF, 그리스에 1,100억 유로의 1차 구제금융 지원 결정 4,400억 유로의 유럽금융안정기금(EFSF) 설립, 유로존 국가 지원용 600억 유로의 유럽금융안정화메커니즘(EFSM) 설립, EU 국가 지원용
2010년 11월	EU와 IMF, 아일랜드에 665억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 결정
2011년 4월	EU와 IMF, 포르투갈에 780억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 결정
2011년 5월	그리스 정부, EU, ECB, IMF에 추가 지원 요청
2011년 7월	유로존 정상회의, 그리스 2차 구제금융 방안 추가 합의
2011년 7월	스페인, 이탈리아 재정위기 우려 고조
2011년 10월	유로존 정상회의, 그리스 민간채권단 채무조정, EFSF 기금 확대(4,400억→7,800억 유로), 민간 은행 자본확충, 위기국 재정긴축 등 종합대책 마련

2011년 12월	유럽연합 정상회의, 신재정협약 제정, 유럽안정화메커니즘(ESM) 조기 출범 합의
2011년 12월	유럽중앙은행, 1차 장기대출프로그램(LTRO) 실시. 유럽 523개 은행을 대상으로 3년 만기 4,890억 유로 규모, 연간 1% 금리 적용
2012년 2월	유럽중앙은행, 2차 LTRO 실시. 5,295억 유로
2012년 3월	EU와 IMF, 그리스에 1,300억 유로의 2차 구제금융 지원 결정(1차 구제금융 미지급분 포함)
2012년 5월 6일	그리스 총선에서 시리자 2위 득표, 프랑스 대선에서 사회당 올랑드 후보 당선
2012년 6월 9일	스페인, 1,000억 유로 은행 구제금융 신청
2012년 6월 14일	스페인 국채(10년물) 금리, 사상 최초로 7% 돌파
2012년 6월 17일	그리스 2차 총선 실시
2012년 6월 28일	유럽연합 정상회의

<표> 유럽 재정위기 주요 사건 일지

2) 구제금융과 긴축정책의 악순환

- 중심국과 IMF는 구제금융 지원조건으로 재정위기국의 강력한 긴축재정과 구조조정을 강요
 - 이들은 '점진적인 조정'보다는 초기단계의 과감한 조정과 개혁이 더 성공적일 것이라 주장
- 주변국은 물론 유럽 각국은 중장기 재정건전화를 위해 재정적자 축소 또는 재정균형의무의 헌법 명시 등 강도 높은 재정긴축을 추진
 -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은 EU와 IMF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의해 강도 높은 재정긴축을 추진
 - 독일은 수정헌법에 따라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016년까지 0.35% 내로 감축해야 함
 - 프랑스는 2013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하로 축소하고 2016년 재정균형을 달성할 계획
 - 이탈리아는 재정균형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고 2014년 재정균형 달성을 목표로 설정
 - 스페인은 헌법에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한도를 설정하고 2013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하로 축소할 계획
 - 아일랜드는 2012년 들어 성장 전망치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재정적자비율 목표(GDP의 8.6%)를 종전대로 추진하기로 결정

국가	일자	주요 내용
그리스	2010.5	재정적자를 2014년까지 GDP 대비 3%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 정부지출 감소: 연금과 임금 3년간 동결, 휴가 축소, 보너스 폐지 등을 통해 2013년까지 GDP 대비 5.25% 감소 정부수입 증대: 부가가치세 인상, 사치세 및 담배·주류세 인상을 통해 2013년까지 GDP 대비 4% 인상 금융권 안정: 금융안정기금을 설립하여 은행 자산의 안정성 제고 연금개혁: 조기 퇴직 시 제공하는 혜택 감소
	2011.6	EU, ECB, IMF와 5년간 283억 유로의 재정건전화 방안이 포함된 중기재정계획 수립 공공부문 지출 삭감: 공무원 임금 삭감 및 공공부문 인원 감축 연금 지출 삭감: 월 1,200 유로 이상의 연금지급액에 대해 20% 삭감 및 55세 이전 퇴직자에 대한 연금지출 최고 40% 삭감 부가가치세 인상(19%→23%), 연료, 담배·술 소비세 인상 텔레콤, 항구, 공항, 전력회사, 정제회사 등 국유자산 민영화
아일랜드	2011.11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안정및성장협약을 2015년까지 충족시키기 위해 2012-15년간 124억 유로의 재정건전화 정책 시행

		공공서비스개혁프로그램을 통해 행정 및 간접비용을 축소: 2015년까지 공공부문 노동자를 37,500명 감원하여 250억 유로의 인건비(2008년 대비 15%) 절감 공공부문 총지출 상한을 정하고, 특히 사회보장(△12억 유로)과 보건지출(△2억8천 유로) 항목에서 지출 대폭 삭감
포르투갈	2011.8	2012년 GDP 대비 4.6%, 2013년 GDP 대비 1.9% 규모의 재정건전화를 시행하여 2015년 재정적자를 GDP 대비 0.5%로 감축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공공부문 임금 동결 및 정원 감축(GDP의 0.4%) 사회보장 및 보건지출 감축(GDP의 0.6%). 특히 연금의 물가상승률 반영 제도 중지 정부 및 공기업 운영비용 등 중간소비 감축(GDP의 0.7%) 지방정부로의 이전지출 등 기타 지출 감축(GDP의 0.1%) 공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감축(GDP의 0.1%)
이탈리아	2011.7	2012-14년간 480억 유로의 절감을 목표로 하는 긴축예산안을 수립 연금수령 및 연령을 기대수명에 따라 조정 조기 퇴직제도 제한 및 고령자(55세 이상) 고용시 인센티브 제공 의료비 지출에 대한 감시 강화 안정및성장협약 및 EU 예산안과 일치하도록 예산규율 강화 재정연방제: 재정분권화를 통해 지방정부 지출권한 및 조세징수권 간 불일치 해결 또한 추가적으로 균형재정 조기 달성(2014→13년)을 위한 455억 유로 규모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수립(2011.9)
스페인	2012.3	2012년 270억 유로를 감축하는 긴축예산안 발표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고 부처별 예산을 평균 16.8% 삭감 실업급여 동결

<표> 각국의 재정위기 대응 현황

○ 그러나 이러한 구제금융-긴축정책 패키지는 자본과 중심국의 이해에 봉사하는 기술관료적 해법일 따름

- 사실 독일·프랑스 등 EU 중심국이 막대한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구제금융을 제공한 것은 주변국 정부와 은행의 위기가 자국 은행의 위기로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

* 2010년 당시 남유럽 국가들이 국채를 발행해서 해외로부터 조달한 자금의 75% 가량을 유럽의 은행들이 보유(프랑스는 23%, 독일은 18%, 영국은 12%). 남유럽의 국채가 부실화될 경우 유럽의 은행들은 대거 지급 불능 사태에 직면. 이는 곧 남유럽 재정위기가 은행 체계를 통해 유럽, 나아가 세계 금융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

- 따라서 남유럽 국가들에 대한 구제금융은 사실상 남유럽 은행들에 대한 구제금융을 의미
- 또한 재정위기에 처한 국가들에서는 좌우파를 막론하고 '현직의 실패', 즉 정권교체 현상이 일반화. 특기할 사실은 재정위기로 인한 정치적 위기 속에서 기술관료*가 긴축정책의 집행자로 등장했다는 점

* 2011년 사임한 그리스의 파판드레우를 대체한 파파데모스와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쿠니를 대체한 마리오 몬티는 각각 ECB 부총재 출신과 EU 집행위원 출신. 이들은 전문 관료 중심의 내각을 구성

○ 실행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긴축재정은 그 자체로 내핍 정책을 의미하며, 따라서 노동자에 대한 강도 높은 공격과 노동권의 악화를 의미

- 그리스는 2008년 이래 줄곧 마이너스 성장. 임금과 연금은 35% 가량 삭감된 반면 개인별 조세는 급증, 공식 실업률은 20%를 초과. 그리스 경제는 사실상 붕괴 상태. 다른 구제금융 지원국도 비슷한 사정

- 구제금융-긴축정책은 '이익을 사유화하되 손실을 사회화하는' 계급 편향적 정책. 이는 민중의 저항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정치적·사회적 실행가능성이 낮음
- 더욱이 통화동맹 하 그리스는 구조조정·노동신축화와 같은 '내부적 평가절하'를 단행하더라도 경쟁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낮음. 즉 경제적 실행가능성도 낮음

*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구조조정을 통한 노동비용의 가치절하 외에도 자국 통화의 대대적인 평가절하를 통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었음. 반면 남유럽 국가들은 화폐동맹에 묶여 평가절하를 단행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비용을 절감하는 방법밖에 사용할 수 없음. 더욱이 그리스의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수출경쟁력 확보를 통한 경제회복은 지극히 한계적

○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민중들은 각국 정부의 긴축재정에 반대하고 EU-IMF의 구제금융을 비판함

- 이들은 자국 정부가 구제금융 제공 조건(conditionality)에 따라 재정을 삭감하고 노동신축화 정책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 ('노동권에 대한 공격을 통해 수출경쟁력의 회복과 국가부채의 지불을 피하는 해법이 비단 그리스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
- 이들은 구제금융 조치의 본질을 금융자본, 특히 유럽 중심국의 이익을 위해 주변국 민중의 출혈을 강요하는 '제국주의'라고 비판 (구제금융은 '민중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본을 회생시키는 조치에 불과하다,' '자본가의 이익에 복무하고 노동자의 실업과 빈곤을 증가시킨다,' '은행을 구원하지만 국가를 구원하지는 않는다')
- 또한 유럽연합의 제도적 결함을 비판하면서 유럽의 연대를 호소 ('유럽 민중들은 위기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연대 유럽을 위해 단결하자,' '유럽 민중의 저항만이 근본적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또 다른 유럽은 가능하다')

○ 결국 그리스는 '사실상의 디폴트' 상태에 처함

- 2009년 이후 그리스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국채에 대한 연간 이자 지급액은 GDP 증가분을 상회
- 그리스는 EFSF나 IMF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유동성 공급이 끊기는 순간 자력으로 만기 도래 국가채무를 지불할 수 없는 디폴트* 사태에 빠지게 됨

* 2011년 7월 EU 정상회의에서 민간채권단이 그리스 국채의 채무상각에 합의했을 때부터 유럽중앙은행은 민간채권단의 채권상각 참여를 포함한 어떤 방식의 채무조정도 디폴트로 간주될 것이라며 비판론을 펼친 바 있음. 국제 신용등급평가기관들도 채무조정을 '부분적(selective) 디폴트'라고 규정

- 독일 등 중심국이 2011-12년간 채무조정을 추진한 것은 그리스의 '무질서한 디폴트'를 막기 위한 '통제된(controlled) 디폴트' 조치였던 셈

3) 제도적 결함: 유럽 차원의 대책 수립의 불가능성

○ 유럽연합은 공동의 통화를 사용하는 주권국가들의 동맹에 불과

- 유럽연합은 조세권도 없고 재정이전도 불가능함. 주권국가들의 통화동맹에 불과한 유로존은 유로본드와 같은 공동 국채 발행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적자재정 정책은 각 민족국가가 부담해야 함
- 유럽연합의 주요한 의제는 핵심 국가들 사이의 타협에 의해 결정. 따라서 유럽연합의 정책

결정 과정은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함. 단적으로, 구제금융의 승인을 위해서는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한데, 이는 상당한 시간을 요구함*

* 단적으로, 2008년 부실자산구제계획(TARP)과 같은 미국의 구제금융 정책이 초안 공개 후 2주 만에 의회 승인이 완료된 데 반해, 2011년 유럽금융안정기금(EFSF) 기능 확대를 위한 유로존 17개국의 의회 승인에는 약 3개월이 소요

- 요컨대, 미국이 연방국가(United States)로서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을 통일적으로 구사하는 민족국가임에 반해, 유럽연합은 초민족국가를 지향하지만 재정동맹 없는 통화동맹에 불과한 탓에 위기 대응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나타남

○ 유럽중앙은행은 개별 정부에 대해 강력한 제도적 독립성을 보유

-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수량완화 정책을 통해 정부의 구제금융 및 적자재정 정책을 지지한 데 반해, 유럽중앙은행은 회원국 정부나 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 역설적이지만, 이런 독립성 덕분에 유럽중앙은행은 경제적 국가장치가 아니라 정치적 행위자로서 일종의 '비상대권'을 행사. 사실 이는 유럽의 제도적 취약성*으로 인한 무능의 산물

* 미국에서는 연준이 재무부 및 여타 경제적 기구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조직하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위기 대응 전략을 추진. 그러나 유럽에는 재무부가 존재하지 않았고 경제적 국가장치의 가교역할도 할 수 없었음

○ 실제로 유럽의 의사결정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역 헤게모니 국가인 독일

- 독일 대법원은 의회가 동의한다면 그리스 구제금융 패키지에 독일이 참여하는 것을 합헌으로 판결했지만, 유로본드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판결
- 독일 메르켈 정부는 일관되게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대한 독일적 관점을 견지.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독일의 '질서 자유주의' 전통을 일관되게 옹호
- 독일의 경우 납세자들이 남유럽 지원을 위해 자국의 조세가 활용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음

<참고> 독일의 삼자택일(트릴레마)

- 지금의 위기는 은행위기와 국제수지 불균형 위기가 결합된 것. 따라서 은행 자본확충이나 역내 불균형 해소가 필요함. 그러나 트로이카는 지금의 위기를 '재정위기'로 간주하여 오로지 긴축과 임금삭감으로 대응
- 유럽의 내부적 불균형, 즉 경쟁력 및 경상수지 불균형은 곧 그에 상응하는 금융적 익스포저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재정적 익스포저를 낳음
- 독일의 국외 금융투자는 특히 유로지역에 집중. 이러한 익스포저 때문에 독일은 (위기국에 대한 직접적 익스포저를 통해서든 프랑스나 영국을 경유한 간접적 익스포저를 통해서든) 위기국과 유로화의 운명에 취약할 수밖에 없음
- 위기에 처한 국가는 은행 지원(구제금융)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지급불능 또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은행은 국가 지원(국채투자)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음
- 화폐동맹 하에서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 발행 주권이 없기 때문에 국가와 은행 모두 자국 중앙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독일은 ECB의 독립성을 이유로 위기에 처한 각국 정부와 은행을 ECB가 직접 지원하는 것에 반대. 그러나 항구적인 경상흑자, 재정적이전이나 구제금융 없는 화폐동맹, 독립적인 중앙은행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 이것이 바로 독일이 처한 삼자택일(트릴레마)
- 경상수지 불균형은 얼마간 지속 가능. 하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면 채무국(적자국)의 파산 가능성이 제기되기 마련. 그러면 민간의 자금조달이 중단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은 공적 대출(구제금융)에 의해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구제금융은 지급불능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는 없음
- 따라서 경상수지 불균형은 오로지 재정이전으로 상쇄될 때에만 유지 가능. 즉 재정동맹이 유로화를 유지할 수

있음

- 그러나 독일은 마스트리히트 체제를 설계할 때 구제금융이나 재정이전을 배제. 지속적인 무역흑자가 무역상대국의 파산을 야기하고, 결국 당초 금지한 처방의 적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사실을 무시
- 화폐동맹 하에서, 각국 정부와 은행의 운명은 상호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채무국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의 은행 문제는 악화될 수밖에 없음. 그러나 독일은 경쟁력 유지를 통해 수출 주도 성장을 지속하려는 태도를 완강히 고수

4. 2012년 5월 6일 그리스 총선: 결과와 의미

1) 경과

□ 사회당 실각과 그리스 과도 정부의 등장

- 2011년 11월, 긴축재정에 대한 여론의 반발, 트로이카의 추가적 긴축재정 압력, 지배계급의 불신과 사회당(PASOK) 내의 사퇴 압력 속에 파판드레우 수상 사임
 - 이후 사회당, 신민주당(New Democracy), 극우 국민당(LAOS)이 참여하는 연정이 구성
 - 본래 차기 총선은 2013년 예정되어 있었지만 2012년 5월에 조기 실시하기로 결정
 - 5월 6일 실시된 총선에서 사회당은 크게 패배한 반면, 반긴축재정을 내건 시리자는 중도우파 정당인 신민당에 이어 2위 득표(16.78%)

순위	당명	성향	득표율	의석수	2009년 총선 대비 득표율 변화	2009년 총선 대비 의석수 변화
1위	신민주당 (ND)	중도우파, 유럽 공동시장주의	18.85%	108 (58+50)	-14.62%	+17
2위	급진좌파연합 (SYRIZA)	범좌파(사회민주주의에서 반 자본주의 스펙트럼)	16.78%	52	+12.18%	+39
3위	사회당 (PASOK)	중도좌파, 사회민주주의, 유럽 공동시장주의	13.18%	41	-30.74%	-119
4위	그리스독립당 (ANEL)	극우 민족주의	10.60%	33	새롭게 창당	+33
5위	공산당 (KKE)	스탈린주의	8.48%	26	+0.94%	+5
6위	황금새벽당 (XA)	극우, 신나치, 민족주의	6.92%	21	+6.68%	+21
7위	민주좌파당 (DIMAR)	사회민주주의	6.11%	19	새롭게 창당	+19

<표> 그리스 1차 총선(2012.5.6.) 결과

- 그런데 어떤 정당도 의석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함
 - 1당인 신민당은 연정을 구성할 사흘 간의 시한을 갖게 되었음. 민주좌파당이 시리자나 공산당과 같은 좌파 정당이 연정에 참여하지 않는 한 자신들도 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힘. 시리자와 공산당은 신민당(이나 사회당)이 긴축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연정 구성을 거부. 이런 이유로 신민당 당수 안토니스 사마라스는 연정 구성을 시도한 지

하루만에 연정 구성을 포기한다고 선언

- 2당에 오른 시리자가 연정을 구성할 권한을 이어받았지만 5월 9일 전통적으로 분과적인 태도를 보이며 연정 참여를 거부한 공산당의 반대로 역시 연정 구성에 실패
- 3당 사회당이 다시 연정 구성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이 역시 시리자의 참여 거부로 연정을 구성하는 데 실패
- 1-3당 모두 연정 구성에 실패하자 대통령에게 연정을 구성할 권한이 넘어가는데, 마찬가지로 연정 구성에 실패하여 6월 17일 2차 총선을 실시하게 됨

2) 선거 결과의 특징

□ 긴축을 주도했던 양당 과두 지배 체제의 종식

○ 이번 총선 결과, 중도좌파인 사회당과 중도우파인 신민당은 이전에 비해 득표율이 크게 하락

- 전통적으로 양당이 그리스 의회를 지배했음. 신민당과 사회당은 의석 과반수 획득에 실패. 이는 전통적인 양당 체제의 붕괴를 의미
- 신민당은 득표율 1위를 기록하고, 그에 따라 1당에게 주어지는 50석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총선에 비해 14% 가량 득표율이 떨어짐. 2009년 정부를 구성했던 사회당은 무려 30% 가량 득표율이 떨어짐
- 사회당이 상실한 득표율은 좌파 정당들이 상당 부분 흡수. 한 분석에 따르면, 19%는 시리자가, 10%는 민주좌파당(DIMAR), 5%는 공산당(KKE)이 흡수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당의 오른쪽에서는, 그리스독립당(ANEL)이 8%를, 황금새벽당(XA)이 4.5%를 흡수한 것으로 보임
- 신민당이 상실한 득표율은 극우 세력이 주로 흡수한 것으로 보임, 15%는 그리스독립당이, 7.5%는 황금새벽당이 가져감. 6% 가량이 시리자가 가져간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

○ 그리스에서 법적으로 투표 참여가 의무화되어있음을 감안할 때 이번 총선의 투표율인 65%는 상당히 낮은 수치

- 투표율이 갑자기 낮아진 큰 이유는, 경제위기로 곤란을 겪는 빈민계급 유권자들이 직장이 있는 도시에서 주거 등록지로 돌아가기 어려웠기 때문
- 또한 기존 정치 체제에 대한 환멸이 전반적으로 커진 것도 투표율이 낮아진 이유 중 하나. 이러한 환멸은 일부 유권자들을 시리자에 투표하도록 했지만 다른 유권자들은 투표를 아예 포기

□ 긴축 반대 주장이 여론을 압도

○ 다른 무엇보다도 이번 총선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긴축 반대 여론이 확실히 드러난 것

- 유효 투표수의 60% 가량이 트로이카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 전제 조건으로 강요한 긴축 재정 프로그램을 반대한다고 선언한 정당이 획득. 또한 좌파 정당들도 상당히 높은 표를 획득. 유효투표수의 37%가 민주좌파당과 녹색당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좌파 정당들에게 쏠려
- 시리자는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음. 16.78%의 득표율로 신민당에 이어 2위를 기록. 이는 2009년 총선에서 얻은 득표율에 비해 무려 12%가 늘어난 수치. 시리자는 그리스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강력한 좌파 정당의 위치를 점해온 공산당을 대신

○ 시리자는 노동자·청년에게 높은 지지를 받아

- 시리자 지지율은 도시지역, 특히 노동자계급 주거 지역에서 특히 높았음. 시리자는 수도 아테네에서 21.81%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으며 노동자계급 밀집 지역인 페리스테리에서와 네아이오니아에서 각각 24.0%와 24.62%를 득표
- 또한 청년층과 중년층에서도 높은 득표율을 기록. 시리자는 18-34세 사이에서 17.5%를, 35-54세 사이에서 20%를, 55세 이상에서 11.5%를 기록. 시리자는 50세 이하 세대에서 제일 높은 득표율을 기록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리자의 지지 기반은 ▲양당 체제에 대한 불신과 정치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무정부주의 경향의 청년층 ▲세금 인상, 임금 삭감, 연금 등 사회보장 및 복지 삭감, 해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이나 화이트칼라(특히 공무원) ▲중도좌파 성향에서 급진좌파 성향을 망라하는 노동조합 ▲이민자와 도시빈민 ▲구조조정이 장기화될수록 파산 위험에 처하게 되고 세금 인상과 적극적 세금징수에 반발하고, 대중시위에 대한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한 분노로 급진화된 중소기업인을 포함

시리자	그리스독립당	신민주당	황금새벽당	공산당	사회당	민주좌파당
19.7%	12.3%	11.7%	9.5%	8.4%	8.2%	5.8%

<표> 그리스 1차 총선 50세 이하 득표율

□ 민족주의와 인종주의의 부상

- 이번 총선에서 두드러진 또 하나의 특징은 극우 세력의 부상, 특히 네오나치 세력인 황금 새벽당이 처음으로 의회에 입성하게 된 것
- 황금새벽당은 극우 민족주의적 입장을 취했는데, 이들은 위기가 악화됨에 따라 대중의 동감을 얻은 것으로 보여. 황금새벽당은 트로이카의 지시를 반대하는 동시에 극단적인 반이주자 입장을 취함. 황금새벽당은 이주자와 이주자 2-3세대, 좌파 정치인들을 공격한 사례가 많음.
- 경제위기 하에서 진보세력이 충분히 조직되지 않고 유의미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 이번 총선에서 황금새벽당이 거둔 성과는 언젠가 외국인혐오증과 파시즘으로의 급격히 회귀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하나의 징후라고 많은 좌파적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지적하고 있음.

5. 그리스 좌파와 시리자의 역사

- 시리자는 진보적 개혁주의 성향의 좌파 정당, 정파, 활동가의 연합체
- 주도 세력은 개혁주의 성격을 지니는 시나스피스모스(Synaspismos, 좌파운동생태주의연합)이지만 급진좌파/마르크스주의(트로츠키주의, 마오주의, 공산주의) 세력을 포함해 20개 이상의 무정파 개인 수천 명도 참여하고 있음
- 시리자의 입장, 잠재력과 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좌파의 역사와 시리자의 결성·발전 과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함.

1) 그리스 좌파의 역사

□ 공산당의 분열과 다양한 좌파 세력의 형성

- 그리스 좌파의 현황은 한국 좌파만큼 복잡함. 또한 한국과 유사하게 제2차 세계대전 시절 반식민지 투쟁으로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음
 - 1918년에 창당된 그리스공산당(KKE)은 전쟁 시기에 반 나치 투쟁을 주도하면서 대중적 지지를 얻기 시작. 이 지지는 전쟁 이후에도 지속되었음
 - 그리스 내전(1946~1949년) 패배로 공산당은 강한 탄압을 받게 되었고 1950~60년대에 활동이 많이 약화
 - 1960년 말부터 70년대까지 지속된 그리스 군부독재 하에서 공산당의 대중적인 활동이 다시 활발해짐. 이 시기에 비공산주의 좌파, 즉 사회민주주의자, 마오주의자, 트로츠키주의자, 신좌파 등도 등장
 - 1968년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략을 바라보면서 유럽 공산당들이 심각한 논쟁과 분할을 겪게 됐는데, 그리스공산당 내에서도 소련에 대한 입장 차이로 갈등이 발생. 결국 지하 공산당 시절 소련에 망명한 활동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파(친소 세력)와 마르크스주의 정치학자 니코스 폴란차스가 대변하는 국내파로 분열
 - 그 결과 (국제)공산당, (국내)공산당*이라는 두 개의 공산당이 결성. (국제)공산당은 나중에 당명에서 국제라는 말을 빼고 현재 공산당만으로 지칭
- * (국내)공산당 경향은 흔히 유로코뮤니즘(Eurocommunism)로 규정. 서유럽에서 유래한 유로코뮤니즘은 소련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비판하면서 서유럽의 각국 상황에 보다 적절한 사회변혁론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출발. 사회 개혁을 위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다 중도(centrist) 세력과의 연대·연합을 적극적으로 시도. 폴란차스는 국가 기구 외부의 대중 투쟁과 국가 기구 내부에서 국가를 변형시키는 활동을 서로 결합하는 “민주적 사회주의” 노선을 주창. 유로코뮤니즘에 대한 좌파적 비판자들은 유로코뮤니즘의 사민주의 또는 민족주의적 경향을 지적
- 1980년대에는 (국내)공산당 내에서 스탈린에 대한 비판을 바탕으로 공산주의 쇄신을 주장하는 세력과 사민주의/개혁주의에 가까운 세력 간의 갈등이 발생
 - 그로 인해 당이 (국내)공산당-혁신좌파(뒤에 혁신공산주의생태좌파(AKOA)로 명칭 변경)와 그리스좌파(EAR)로 분할
 - 1989년에 소련에 대한 입장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공산당(구 (국제)공산당)과 그리스좌파는 선거 공동 대응을 위해서 몇 개 소수 정당과 함께 시나스피스모스로 불리는 좌파진보연

합(2003년에 좌파운동생태연합으로 명칭 변경)을 결성하고 선거에서 13%라는 상당히 높은 득표율을 기록

- 당시 총선에서 어떤 정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서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보수언론들이 집권당인 사회당의 (실존하는) 부정부패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상황에서, 시나스피스모스는 신자유주의적 보수 정당인 신민당이 제안한 임시 연정에 참여하기로 결정
- 1989년 말에 치른 2차 총선 후에 시나스피스모스는 신민당, 사회당과 함께 연정을 구성. 이 기간 동안 시나스피스모스가 사회당과 신민당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에 동참
- 공산당이 지배세력과 정치연합을 시도한 것에 대한 내부 반발에 소련의 붕괴라는 상황이 겹치면서 다시 공산당 내에서 분열이 발생. 이번에는 공산당의 청년동맹(KNE)이 지배계급과의 협조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시나스피스모스에서는 물론이고 공산당에서도 탈퇴해서 신좌파경향당(NAR)을 창당
- 신좌파경향당은 2009년에 결성된 급진적 반자본주의 연대기구인 반자본주의좌파연합(Antarsya, 이하 '안타르시아') 핵심 축을 형성.
- 공산당은 소련 붕괴 후에 친소 노선을 확실히 표명하지 않은 모든 간부를 제명하고 시나스피스모스와 분리. 이들은 후르쇼프, 브레즈네프, 고르바초프의 개혁 노선을 지지하다가 1990년대 스탈린을 '재발견'한 이후 완고한 스탈린주의 노선을 재확립. 그리스좌파와의 협력시도가 실패한 시기부터 확고한 분파주의를 고수하면서 모든 활동을 단독으로 수행

□ 시나스피스모스의 결성

- 1991년에 그리스좌파는 시나스피스모스에 참여한 소수 세력과 함께 시나스피스모스의 정당 전환을 결정
- 그러나 시나스피스모스(그리스어로 '연합'을 의미)의 조직명을 유지하며 열려 있는 범좌파적 성격을 유지하도록 함.
- 이때부터 국제마르크스주의경향을 비롯한 보다 급진적인 여러 세력이 합류. 또 1990년 말부터 2000년대 초에 시나스피스모스가 반세계화 운동에 참여하면서 참여세력이 더욱 확대
- 이처럼 나중에 시나스피스모스에 합류한 좌파는 기존 지도부와 갈등하면서 시나스피스모스의 좌경화를 주도
- 2004년 시나스피스모스의 주도로 총선 대응 연합체로서 시리자가 출범

□ 안타르시아의 결성과 역할

- 안타르시아는 2009년 결성된 급진좌파세력의 연합으로, 이들은 이전부터 수년간 다양한 공동 활동을 펼쳐왔음
- 여기에는 열 개의 정파들이 참여. (이전에 공산당청년동맹(KNE)이었다가 분리한) 신좌파경향당(NAR), 국제사회주의경향의 그리스 지부인 사회주의노동자당(SEK), 제4인터내셔널 그리스 지부인 그리스스파르타쿠스공산주의국제주의조직(OKDE-Spartakos), 혁신공산주의생태좌파(AKOA)에서 분리된 공산주의혁신 등. 그밖에도 마오주의, 트로츠키주의,

공산주의, 좌파적 생태주의 등 다양한 좌파 세력이 참여

- 안타르시아는 2009년 총선에서 불과 0.36% 득표하는 데 그쳤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2%, 그리고 지난 5월 총선에서는 1.2%를 득표

○ 선거 정치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은 아니지만, 안타르시아는 지역·현장 수준에서 지난 2년간 활발한 활동을 펼침. 이들은 노동자·이주자·청년들의 다양한 투쟁을 지지·지원

- 파업에 돌입한 신문사노동자들과 함께 기존 신문을 대체할 파업신문을 새롭게 발행한 것이 라든지 아테네암치료병원 노동조합 선거에서 이전의 친사회당 집행부를 대신해서 안타르시아 계 집행부가 등장한 것이 최근 주목할 만한 사례

- 또한 안타르시아는 대다수 다른 좌파들이 체제를 넘어서는 경제위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을 때, 긴축정책 반대는 타협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며 부채의 완전한 탕감과 은행 국유화를 요구함. 이들은 시리자 내 좌파 세력들이 보다 급진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끼침

□ 좌파 세력들의 EU에 대한 입장

○ 1990년대 초부터 유럽연합에 대한 입장은 그리스의 다양한 좌파세력 간에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

- 시나스피스모스의 주류 세력인 그리스좌파는 EU의 부정적인 경제적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EU의 본질을 '진보적 사회정책'으로 규정하고 EU 참여를 그리스의 현대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
- 반면 공산당은 EU의 즉각적 탈퇴를 주요 슬로건으로 제시
- 시나스피스모스 비주류 세력 및 시나스피스모스 외부에 있는 좌파들의 입장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지만) 대체로 '자본이 주도하는 EU에 반대. 유럽 노동자, 이민자 사이의 연대를 강화하고 자본에 공동으로 대응하자'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음
- 아래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각 세력이 제시하는 경제위기 탈출 방안은 EU를 바라보는 관점과 밀접히 연관

2) 시리자의 결성과 발전

□ 시리자의 결성

○ 2004년에 결성한 시리자에 참여하는 조직 중의 상당수가 시나스피스모스보다 좌파적

- 시리자에는 ▲1980년 스탈린주의와 개혁주의를 비판하면서 (국내)공산당으로부터 분화한 혁신공산주의생태좌파(AKOA) ▲미국 국제사회주의조직(ISO)과 관계를 맺는 국제노동자좌파(DEA) ▲공산당의 분파주의에 반대해서 분화한 세력인 좌파연합행동운동(KEDA) ▲반나치 투쟁의 영웅인 마놀리스 글레조스가 지도하는 능동적시민 ▲마오주의 경향인 그리스공산주의조직(KOE) 등이 포함. 트로츠키주의 국제조직인 노동자인터내셔널위원회(CWI)의 그리스 산하조직인 세키니마(Xekinima)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참여

- 시리자 내에서 시나스피스모스보다 오른쪽에 있는 정당/정파는 2007년에 시리자에 결합한 민주사회운동(DIKKI)과 단결운동(Unity Movement)이 있는데, 둘 다 사회당에서 분열된 세력

○ 사실 원내 정당이 보다 좌익적인 원외 세력들과 선거연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시나스피스모스가 이 전략을 왜 채택했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1990년 말부터 시나스피스모스 좌파/비주류 세력은 주류세력인 그리스좌파의 영향력에 도전하기 위해서 시나스피스모스 외부에 존재하는 다른 좌파 세력들과의 제휴를 모색하기 시작했고 2004년 시리자의 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이러한 세력들에게 시리자는 “좌파의 단결”이라는 전략적/원칙적 목표와 일관성이 있는 것처럼 현상

- 그리스좌파 출신 시나스피스모스 당수 니코스 콘스탄토팔로스와 당 지도부가 좌파 단결이라는 목표를 진심으로 공유했는지는 의심스럽지만, 이들은 3% 득표율, 즉 의석 확보에 필요한 최소 득표율을 확보할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시리자의 결성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결국 2004년 총선에서 시리자는 3.3%를 득표해서 6개 의석을 획득. 이 결과는 선거연합의 성공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곧이어 시리자 안에서 의원 명부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당선된 의원 6명은 모두 시나스피스모스 당원이었음). 같은 해 6월 유럽연합 의회 선거에서도 같은 문제로 의원 명부를 아예 구성하지 못해 선거연합이 중단되는 것으로 귀결

□ 시나스피스모스 내부의 좌우 대립

○ 2004년 말 시나스피스모스 당권 선거에 좌파와의 연합을 확고히 지지하는 알레코스 알바노스가 이전의 콘스탄토팔로스 지도부를 대체하여 당수로 선출되면서 내부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

- 알바노스의 지지 속에 2008년에는 현 당수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시나스피스모스의 대표로 선출

- 그러나 다음해 시나스피스모스가 집권 사회당과 타협적 태도를 보이자 알바노스는 마오주의 경향인 그리스공산주의조직(KOE)과 트로츠키주의 경향인 국제노동자좌파(DEA) 등과 함께 연대와전복을위한전선(Front for Solidarity and Rupture)을 결성해서 시리자 내에서 시나스피스모스가 주도하는 우경화에 도전. 이들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아티카 지역에 독자 출마하기도 함

- 같은 시기에 시나스피스모스는 좌우 분열을 겪게 되어 그리스좌파 세력을 중심으로 사민주의 경향의 신좌파당을 창당. 신좌파당은 이번 총선에서 6.11%(7위)를 득표

○ 당내 우파인 신좌파당이 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나스피스모스에 잔류한 세력 간에는 경제위기 탈출 문제에 관해 분명한 입장 차이가 나타남

- 아래에서 다루겠지만, 시나스피스모스의 공식 입장은 시나스피스모스 내부의 좌파/비주류적 입장 및 시리자 안의 비 시나스피스모스 급진좌파 세력들의 입장과 확연히 차이가 있음

- 시나스피스모스 좌파/비주류 세력과 시리자 안의 비 시나스피스모스 급진좌파는 이번 5월

선거 전부터 지도부와의 이견을 공공연히 표현하고 안타르시아와 함께 여러 네트워크에 참여. 현장에서 시리자 좌파 세력은 안타르시아와 연대/협조적 관계를 맺고 있음

3) 소결

-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시리자는 시나스피스모스의 노력으로 결성됐고, 지금도 그리스 좌파 진영 내 다양한 세력 간에 반복되는 갈등과 협력 속에서 변화하는 과정에 있음
- 아직까지 시나스피스모스의 개혁주의적 세력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시리자 안의 좌파 세력이 안타르시아 등 시리자 외부의 좌파 세력과 연대하면서 시리자를 좀 더 좌파적으로 변화시켜움

6. 시리자가 선거에서 선전한 배경

1) 외부적 요인: 2년간의 반긴축 대중운동

□ 긴축반대 대중운동의 영향

- 시리자의 선전은 잘 기획된 선거운동의 결과로 이해하기보다는 반긴축 대중운동의 영향으로 이해되어야 함
 - 지난 2년간 긴축정책에 대한 분노가 노동자의 파업과 '분노하는 사람들'의 점거운동 등 강력한 반긴축 운동을 촉발했고, 이것이 시리자의 선전으로 이어짐
 - 2차에 걸쳐 제공된 구제금융 및 이것이 부과하는 긴축 프로그램이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 총선 시기에 분명히 드러남. 높은 실업률(특히 청년실업률), 평균 22%의 임금 삭감, 15-25%의 연금 삭감, 기타 보건의료·교육·보육 등 사회서비스의 악화, 아테네에만 2만5천 명에 달하는 노숙인들의 행렬, 사상초유의, 그리고 지속불가능한 국가 부채 등
- 2009년 총선 이후 지난 2년간 총 17번의 긴축 및 노동악법에 반대하는 총파업이 펼쳐짐
 - 그리스의 최대 민간부문 노총인 GSEE의 집행부는 전통적으로 친사회당 계열. 사회당은 2009년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차지. GSEE 집행부는 40% 이상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정부에 반대하는 것은 정세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며 총파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
 - 그러나 이 입장은 2009년 12월부터 변화하기 시작.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강등하자마자 새롭게 수상으로 취임한 파판드레우는 사회보장 지출을 10% 삭감하고 공공서비스 부문 노동자의 고용을 동결한다고 선언
 - 최초의 총파업은 공산당 계열의 노총인 PAME에서 제안. 교사, 국립병원 의사, 항만 노동자, 신문기자 등 노동자들은 PAME의 호소에 호응하여 12월 17일 하루 총파업에 돌입. 파업에 참여한 일부 노조는 PAME 소속이 아니었음
 - GSEE는 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음. 그러나 이틀 뒤 GSEE와 연계를 맺고 있는 공공부

문 노총(사회당 계열)인 ADEDY는 2010년 초 하루 총파업 계획을 발표. 이는 GSEE가 파업 반대 입장을 재검토하게 된 계기

- 2010년 1월 양대 주류 노총은 공동 총파업을 논의. 파판드레우 수상이 독일 등 다른 유럽 연합 국가들의 압박에 더밀려 연금수령 연령을 재조정하는 새로운 긴축정책을 발표하자, ADEDY는 2월 10일 총파업에 돌입. 이어서 GSEE와 ADEDY가 공동으로 2월 24일 총파업에 돌입. 트로이카가 그리스에 1,100억 유로의 1차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수반되는 그리스 정부의 긴축정책안이 의회를 통과한 5월 5일까지 공공·민간 부문을 망라하여 여러 번의 총파업이 진행됨
- ADEDY와 GSEE의 집행부의 입장 변화는 긴축정책에 분노하는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 2010년 상반기 총파업이 여러 번 진행되면서 조합원들의 참여도 늘어남. 총파업 초기만 하더라도 대다수 노동자들이 가두시위에 동참하지 않고 단지 출근만 하지 않는 수준이었지만, 이후 총파업이 진행될 때에는 현장에서의 결의대회, 파업위원회 구성 등의 과정을 통해서 현장·지역 차원의 조직화와 대규모 가두시위가 동반됨

○ 2011년 5월부터 노동자 투쟁은 그리스 ‘분노하는 사람들’ 운동과 결합하면서 더욱 강화

- (2011년 초 튀니지와 이집트의 혁명에 영감을 받은) 스페인의 ‘분노하는 사람들’에 고무된 그리스의 ‘분노하는 사람들’ 운동은 SNS를 통해서 5월 26-27일 여러 지역에서 최초로 대중 시위를 조직함
- 이 투쟁들은 아테네의 신타그마 광장과 테살로니키의 백탑광장 점거로 이어짐. 광장 점거운동은 2011년 8월까지 지속되었는데, 노조나 좌파 정당과 같은 전통적인 조직 외부에서 자생적으로 조직된 반긴축 대중운동의 새로운 형태의 상징적·물질적 근거지가 됨
- 유럽의 ‘분노하는 사람들’ 운동과 미국의 ‘점령하라’ 운동과 유사하게 그리스의 ‘분노하는 사람들’ 운동은 청년, 그중에서도 기성 정치 체계에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무정부주의적인 청년들이 주도. ‘분노하는 사람들’과 ‘점령하라’ 운동은 분권적인 조직 형태와 수평적인 의사결정 체계라는 특징을 공유
- 기존 노조 집행부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이런 운동들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함. 그리스의 ‘분노하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보다도 특히 파업 투쟁에 적극 결합함. 2011년 5월 이후 ‘분노하는 사람들’은 총파업 때마다 가두에서 연대

○ 그러나 그리스의 부채 위기는 진정되지 않았고, 7월 이후 ‘사실상의 디폴트’ 사태에 처한 그리스에 대해 추가적인 구제금융-긴축재정안이 논의되고 있었음

- 그리스의 긴축조치가 원활히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1차 구제금융 기금 제공이 중단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리스 정부는 다시 더욱 강력한 긴축조치를 발표. 그러자 그리스 노동자들은 이에 항의하여 10월 19-20일 이틀에 걸쳐 총파업을 진행
- 그리하여 지난 5개월 동안 발전된 노동자와 ‘분노하는 사람들’의 동원력이 결합되어 강력한 투쟁이 펼쳐짐. 아테네에서만 30만 명이 가두시위를 펼쳤고, 그 외 지역에서도 20만 명이 총파업 및 가두시위를 전개. 대부분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업장이 총파업으로 가동이 중단
- 파업 시기에 정부 부처를 포함한 공공 건물 점거 운동이 펼쳐졌고 정부가 재정건전화 방안

으로 도입한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운동이 펼쳐지기도 함. 공산당과 PAME은 10월 20일 의회를 봉쇄하기도 함. 10월 말까지 지속된 이 투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공공·민간부문 노동자는 물론 실업자, 청년, 중소기업인, 연금수령자 등이었음

- 이런 상황에서 파관드레우 수상이 2차 구제금융에 관련한 국민투표를 제안하고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이후 사임

○ 새로운 구제금융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2012년 2월에도 이와 유사한 규모로 파업과 시위가 펼쳐짐

- 이것은 파관드레우 사임 이후 구성된 과도 연정에 대한 대대적인 반발을 보여줌. 그에 따라 극우 세력인 국민당은 연정에서 물러났고, 신민당 내부의 분열을 촉발하였으며 사회당이 지지기반으로부터 소외되는 상황을 초래함
- 5월 총선에서 시리자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는 지난 2년간 발전한 대중운동의 자연스러운 결과

2) 내부적 요인: 개방적인 성격과 유동적인 강령

- 앞서 보았듯이 대중의 긴축정책에 대한 분노와 2년에 걸쳐 치열하게 진행된 아래로부터의 노동자·민중의 투쟁이라는 외부적 조건이 시리자의 5월 총선 선전의 주요 요인
- 이와 함께 여러 내부적 조건들도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개방적인 성격과 반분파적인 이미지 ▲대중 접근성이 높은 조직구조 ▲유동적인 입장 및 강령으로 요약할 수 있음. 이러한 요인이 오랫동안 선거운동을 해온 공산당이나 다른 진보세력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보임

□ 개방적인 성격과 반분파적 이미지

- 앞서 언급했듯이, 1990년대부터 공산당은 다른 정파들과의 어떠한 공동 활동도 거부
- 이러한 분파적인 태도가 많은 활동가와 일반인으로부터 거부감을 불러일으킴
- 반면 시리자는 2004년 창립 당시부터 분파주의 극복과 좌파단결(Left Unity)을 주 슬로건으로 제시
- 총선 전후 시리자는 통일적인 좌파정당 건설을 주장하면서 공산당, 안타르시아 등에게 논의를 제안. 이러한 태도가 공산당 등 전통적 좌파정당에 대해 환멸을 느끼던 이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한 듯

□ 대중 접근성이 높은 조직구조

- 시리자의 개방적인 성격은 조직구조에서도 나타나
- 시리자는 여러 노선의 연합체로서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갖는 유권자를 포괄할 수 있음. 공산당이나 공산당과 분리된 정파의 엄격한 강령에 반감을 느끼는 유권자에게도 매력적
- 시리자는 지역 조직 체제를 통해 접근성을 확대. 각 지역에 지역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노동자와 '분노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현장투쟁을 지지·지원. 지역 차원에서 안타

르시아 등 급진좌파 세력과 공동 활동을 벌임

- 시리자에 참여하는 좌파 정당 및 정파는 사업장 단위 파업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노동자의 신뢰와 지지를 획득
- ‘총회’(general assembly)*와 같이, ‘분노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수평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도입해 대중적 인정을 얻음. 5월 총선 이후에 여러 지역에서 총회를 열고 연정 구성에 관한 논의를 진행

* ‘분노하는 사람들’ 운동에서 ‘총회’는 주요한 의사결정 기구.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면서 동등한 발언권과 의사결정권을 가진.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 유동적 입장과 강령

○ 총선 전에 시리자는 세부적 강령을 발표하지 않았음

- 사실 다양한 성향의 연합이라는 조직형태를 유지하는 한 구체적 강령을 내는 것은 어려움
- 총선 전까지 시리자의 주요 메시지는 트로이카와의 구제금융 조건, 즉 긴축정책 부인임. 그러나 ‘구제금융 조건 부인’이나 ‘긴축정책 반대’라는 슬로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함
- 총선을 앞두고 대중 집회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치프라스를 비롯한 시리자의 지도부는 ‘전체 구제금융 프로그램과 긴축정책의 완전 철회’를 주장해 트로이카에 확고히 도전. 그러나 선거 이후에 보수언론의 공격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긴축정책의 일부 수정 및 향후 재협상’으로 입장 수정

○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유로존 탈퇴 여부에 대해서 치프라스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not an option)고 언급

- 유로존 탈퇴와 관련하여 시리자의 공식입장(2011년 11월 전국당대회)은 “유로를 위해 희생하지 않겠다”(No sacrifice for the Euro)는 것. 이는 대단히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 최근에 치프라스는 ‘[유로존 탈퇴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것이 당의 공식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함.
- 반면 과거 공산당원이던 시리자의 발라바니(Valavani) 의원은 이 슬로건을 아래와 같이 설명. “시리자의 전략은 어느 한도 내에서 유로존 잔류하는 것이다. 그 한도는 간단하다. 그리스 국민이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 유로화가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이다. 이 도구가 우리를 숨통을 막으면 다른 입장을 취해야 한다.”

○ 2차 총선을 앞두고 5월 말 시리자는 보다 구체적인 강령을 발표

- 그리스 국내 정책과 관련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과 부자와 자본에 대한 과세 강화 ▲단체협약 효력 회복, 노동기본권 보장 ▲선거제도 민주화
- 그리스 구제금융과 관련하여, ▲채무지불유예와 채무재조정 ▲자금 지원 시 고용과 경제개발 보장 조항이 동반해야 함
- EU 제체의 개혁과 관련하여, ▲유럽 국가들의 공동 부채 관리 ▲최종대부자로서 ECB의

역할 변경(위기국 정부에 대한 직접 대출, 사회보장 기금 지원) ▲투기금융상품 금지 ▲ EU 차원의 부유세·금융거래세 도입

- 이상은 기본적으로 시나스피스모스가 가입한 유럽좌파당(European Left)의 입장과 유사
- EU 체제나 ECB 개혁에 관한 강령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리자는 유로존 잔류를 전제로 함
 - 또한 부채 탕감과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완전한 부인보다 구제금융 프로그램 조건 재협상에 초점을 둬. 채무지불유예는 급진적인 좌파 세력들의 입장, 즉 부채의 완전한 탕감보다 상당히 온건한 입장
 - 시리자 입장의 유동성과 총선 이후의 온건화는 보수언론의 공격 앞에서의 후퇴로 이해될 수 있음
 - 한편 이를 대중적 정서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 기초한 태도로도 볼 수 있음. 보수언론은 '시리자를 위한 투표는 유로존 탈퇴를 위한 투표'라는 식으로 공격. 대다수 그리스 민중이 유로존 탈퇴에 대한 상당한 공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의 영향이 큼. 시리자 지도부는 대중을 분노하게 하는 긴축정책에 대한 대안을 확실히 제시하면서도 유로존 잔류할 의사를 분명히 보여주고자 애썼. 시리자는 긴축에 대한 분노와 유로존 탈퇴에 대한 공포라는 두 정서 사이에 균형을 찾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임
 - 시리자는 정권 교체와 트로이카와의 협상이라는 '평화로운' 과정을 통해서 사회변화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뚜렷하게 전달. 이는 많은 일반인들에게 적대적인 계급투쟁을 꾸준히 이야기해온 공산당의 입장보다 수용하기 편함

3) 소결: 시리자의 장점과 한계

- 이러한 시리자의 유동적인 입장은 지금까지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 하지만 이것은 시리자의 한계가 될 수 있음
- 시리자는 2차 총선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하더라도 신좌파당과 같은 중도좌파 또는 신민당과 연정을 구성해야 할 가능성이 높음
- 연정을 구성할 경우 트로이카의 압박이 매우 강할 것이며 특히 유로존 잔류 입장을 고수하면 양보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 'austerity light' 즉 완화된 긴축정책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음. 과거 시나스피스모스가 신민당·사회당과 연정을 구성했을 때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행한 행태를 보면 이 가능성이 보다 뚜렷함
- 또한 시리자 참여세력 사이에 위기의 원인에 대한 구조적 분석이 공통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치프라스와 같은 시나스피스모스 지도자들은 (시리자를 지지하는 많은 대중과 유사하게) 경제위기의 원인을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카지노 자본의 탐욕으로 봄. 그렇기 때문에 정부교체와 구제금융 프로그램 재협상을 통해 자본과 적대적인 대립 없이도 그리스 민중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음
- 그러나 트로이카에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것은 상당히 격렬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 과정일 수밖에 없음. 그리스 민중이 유로존 탈퇴에 대해 느끼는 공포*를 존중하면서도, 위기의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교육과 선전을 통해 장기적인 투쟁을 준비해야 함. 시리자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지지기반이 급속히 축소될 수 있음

* 트로이카와 우파는 그리스 총선을 유로존 잔류 여부와 긴축정책 수용 여부에 대한 사실상의 국민투표로 몰아

- 가기 위해 압력을 행사. 트로이카는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한다면 환영받겠지만 그리스가 유로존을 이탈할 경우를 대비해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식으로 강경 노선을 취함. 신민당 대표 안토니스 사마라스는 구제금융안을 거부하는 어떤 행위도 그리스를 헤어날 길이 없는 악몽으로 빠뜨릴 것이라고 선동
- 확고한 강령과 위기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의 부재는 결국 사민주의적 경향인 시나스피스모스 주류 세력의 영향력이 아직까지 매우 크기 때문. 시리자 내 좌파/비주류 세력은 시나스피스모스에 대한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 때문에 많은 점에서 양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구조적인 원인을 지적하고 대중적 교육과 조직화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시리자 외부의 좌파 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참고> 그리스 2차 총선 지형

- 여론 동향은 신민당과 시리자가 백중세를 보이고 있음
 - 5월 말 일부 여론조사 기관* 발표에 따르면 시리자가 신민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 * 그리스 여론조사 기관 VPRC와 Public Issue에 따르면 시리자는 30%, 31.5%를 얻어 신민당에 각각 3.5%와 6%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그 직후 다른 12개 여론조사 기관들이 발표한 최종* 지지율을 단순 평균하면 신민당(26.4%)이 시리자(25.7%)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 * 6월 2일부터 총선 관련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돼 사실상 마지막 여론조사에 해당
- 2차 총선 이후에도 한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기 어려운 상황
 -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약 40%의 득표율*이 필요하므로, 현 추세대로라면 어느 정당도 단독으로 정부를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
 - * 그리스 선거제도는 총 300개의 의석 중 250석을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며 나머지 50석은 최대 득표 정당에 자동적으로 부가하는 방식. 한편 의석 할당에 필요한 최소 득표율을 3%로 규정하여 이에 미달하는 군소정당의 득표는 사표로 처리되어 정당별 의석수 계산에서 제외. 따라서 단독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해서는 실제로 40%의 득표율을 기록해야 함
 - 현재 선거구도는 구제금융-긴축재정에 대한 찬반 프레임으로 형성되어 있음. 각각을 대표하는 신민당과 시리자로 지지가 집중되면서 군소정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음

7. 그리스의 급진적 좌파 세력들의 입장

- 시나스피스모스 주류세력은 “EU-IMF 메커니즘으로부터의 철수”(disengagement from the EU-IMF)를 주장하면서도 유럽공동체 잔류와 재구성을 주장
 - 그리스와 여타 남유럽 국가의 채무구조조정, ECB의 직접 대출과 유로본드 발행을 위기 탈출 방안으로 제시
 - 또한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유럽연합 조약 개정, 그중에서도 특히 채무조건(GDP 3% 이하 연간 재정적자, GDP 60% 이하 국가 부채)을 규정하는 안정및성장예관한협약의 폐지와 이의 사회보장에관한협약으로의 대체를 주장
 - 이는 소위 “유럽의 재건을 위한 조정”(coordination for the refoundation of Europe)을 위한 전략. 위에서 봤듯이 시리자가 발표한 강령과 유사
- 반면 시리자 내부의 좌파나 시리자에 참여하지 않은 급진 좌파 세력들 대부분은 EU의 신

자유주의적 본질을 고려할 때 유로존 탈퇴와 EU와의 분리는 필연적인 것으로 봄

- 이들의 입장은 대체로 런던대학교 경제학 교수 코스타스 라파비차스(Costas Lapavitsas)가 제출한 위기 해결책으로 수렴됨. 라파비차스는 그리스가 채무탕감 및 디폴트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
- 그럴 경우 그리스는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겠지만, 노동자 주도의 부채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채를 분류하여 이를 처리하고, (디폴트 선언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유로존 탈퇴 이후 통화제도의 변화에 따른 충격이 은행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은행의 사회화와 민주적 통제를 해야 한다는 것
- 라파비차스는 이는 통화의 평가절하와 '내부적 평가절하'(internal devaluation)의 중단과 수출을 통한 경쟁력 회복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주장. 그가 보기에, 이러한 과정은 트로이카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EU 공동체의 해체를 의미하지 않음
- 그리스의 급진적 좌파 세력들은 대체로 라파비차스의 방안에 동의하되 이를 관철하는 전략과 현재 정세 규정에 있어서 미묘한 이견이 존재

조직명	배경	성향	국제상급 조직	입장				
				선거연합/좌파정당 구성	긴축정책	채무	유로존/EU	정세규정
급진좌파연합 (SYRIZA)	2004년 시나스피스모스 중심으로 결성	범좌파	--	제안 주체	재협상	지불유예	잔류, EU 재정립	
좌파운동생태주의 연합 (Synaspismos)	1989년 (국내)공산당와 (구제)공산당의 선거연합으로 시작; 1991년 정당 전환	유로코뮤니즘, 사회민주주의; 1990년말~2000년 초, 반세계화 운동에 참여	유럽 좌파당	찬성	재협상	지불유예	EU와 유로존 잔류; EU에 대한 비판적 지지, 점진적 개혁	시리자의 총선 선전은 대중운동의 승리, 정부 교체 우선적
시나스피스모스 마르크스주의자	1990년대 시나스피스모스가 확정되면서 합류	트로츠키주의	국제 마르크스주의 경향(IMT)	신좌파당 배제하는 좌파정부에 찬성, 시리자의 대중정당으로 전환 주장	완전 철폐	완전탕감	이탈 불가피함; 사회주의 유럽 건설 주장	혁명적
국제노동자좌파(DEA)	2001년 SEK와 분리, 시리자 창립 조직, 연대와전복을위한전선 결성 주도	트로츠키주의	미국 ISO와 자매관계	찬성; 공산당, 안타르시아 참여 호소	완전 철폐	완전탕감	강제 이탈 가능성 낮음; 유로존 탈퇴 논쟁보다 유럽 노동계급의 연대와 유럽 개혁 방안 모색이 우선적	비혁명적
그리스공산당	1980년대 공산당	마오주의	마르크스	찬성	완전 철폐	완전탕감	유로존과	--

의조직(KOE)	과 분리된 세력 중심으로 2003년 창립		레닌주의 정당과 조직국제회의 (ICMLPO)				EU 탈퇴		
세 키 니 마 (Xekinima)	2007년에 시리자에 합류하다가 2011년에 탈퇴	트로츠키주의	노동자 인터내셔널 위원회 (CWI)	찬성	완전 철폐	완전탕감	유로존 이탈 불가피함; 유럽 노동계급 연대 강조	혁명 전의 시기	
반자본주의좌파 연합 (ANTARSYA)	2009년 결성	급진좌파	--	반대	완전 철폐	완전탕감	유로존과 EU 탈퇴	혁명 전의 시기	
사회노동당 (SEK)	그리스 독재시대 런던에 공부하는 유학생에 의해 창립; 1990년대 국제사회주의경향과 관계 맺음	트로츠키주의	국제사회주의경향 (IST)	선거연함에 참여 안 하지만 동지적 관계 유지; 범좌파 반파시즘 전선 제안		완전 철폐	완전탕감	유로존 이탈 불가피함	혁명 전의 시기
그리스스파르타쿠스공산주의국제주의조직 (OKDE-Spartakos)	제4인터내셔널 그리스 지부	트로츠키주의	제4인터내셔널	특수한 조건 하에서 지지할 수 있음	완전 철폐	완전탕감	유로존과 EU 탈퇴	혁명 전의 시기; 극우 세력 부상 가능성 강조	
공산당(KKE)	1940년 초 반나치 투쟁으로 부상	스탈린주의	공산·노동당 국제회의	반대	완전 철폐	완전탕감	유로존과 EU 탈퇴	비혁명적	

<표> 그리스 주요 좌파 세력들

1) 유로존 이탈: 필수적인가 필연적인가

- 그리스 급진 좌파들은 그리스가 언젠가 유로존을 이탈/탈퇴할 것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 하지만, 이탈/탈퇴가 당장의 직접적인 투쟁 목표인지 아니면 정치·경제위기의 불가피한 결과인지에 대해 이견이 존재
- 공산당이 즉각 유로존 탈퇴를 투쟁의 목표로 설정하는 입장을 대표함. 이는 1990년 초부터 공산당의 EU에 대한 입장과 일관됨. 공산당은 시리자가 1위를 차지하고 연정을 구성해도 본질적으로 친지배계급 및 친트로이카 성격을 지닐 것이라고 주장. 따라서 유로존 탈퇴가 필수적이지만 당분간 실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
- 공산당과 유사하게 안타르시아는 유로존 탈퇴, 나아가 EU와의 분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 또한 이들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 이들은 그 가능성을 두 가지 차원에서 전망. 우선 유로존 탈퇴에 국유화와 같은 진보적 정책이 동반될 때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 또한 유로존 탈퇴는 대중적 투쟁을 통해서 관철될 수 있다고 주장
- 그러나 사회노동당(SEK)을 비롯한 안타르시아에 참여하는 세력 일부는 유로존 이탈과 유로존 해체는 투쟁의 목표라기보다 유로존에 내재한 모순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라고 봄.

- 시나스피스모스마르크스주의자, 연대와전복을위한전선 등 시리자에 참여하는 급진 좌파 세력 일부와 세키니마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공유
- 앞서 보았듯이 이러한 세력들은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에 앞서 전개될 트로이카에 맞선 중장기 투쟁에 대비해서 조직화와 대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 또한 유럽 차원에 노동자의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언급. 세키니마는 각국 노동계급 간의 연대를 통해 자본의 EU를 대체할 사회주의유럽 건설이라는 구체적인 강령 제시
- 시리자 창설 단체 중 하나인 국제노동자좌파(DEA)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이 그리스의 이탈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를 필연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확고한 계급투쟁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동의

2) 시리자와의 관계

- 또한 그리스 급진좌파는 시리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해 차이가 있음
-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시리자에 참여하는 급진좌파는 좌파의 단결과 좌파정부 구성을 주장함. 시나스피스모스마르크스주의자는 시리자가 단일 대중정당(mass party)으로 전환해야 한다고까지 주장
- 2007년에 합류하다가 2011년에 탈퇴한 세키니마도 선거연합과 좌파정부를 주장하며 안타르시아와 공산당의 참여를 호소
- 안타르시아는 많은 논쟁 끝에 6월 17일 총선에 독자 출마를 결정. 독자적으로 의원을 당선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기보다는 분명한 반자본-반트로이카 노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 그러나 안타르시아에 합류한 일부 정파는 시리자와 동지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선거연대와 공동 활동의 중요성을 주장. 사회노동당은 인종주의와 파시즘에 저항하는 공동전선 구성을 제안하고 있음. 6월 8일에 그리스 전역에서 시리자 등 여러 세력들과 반파시즘 집회를 전개. 그리스스파르타쿠스공산주의국제주의조직(OKDE-SPARTAKOS)은 특정 조건하에서 시리자의 좌파정부를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

3) 정세 규정

- 또한 현재 그리스 정세를 보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 이는 어떤 전략을 택하는지에 영향을 미침
- 시리자 내의 시나스피스모스마르크스주의자의 경우 현재 그리스는 혁명적인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 이에 따라 대중정당으로의 전환을 주장
- 반면 시리자에 참여하는 국제노동자좌파는 현재 정세가 혁명적이지도 않고 혁명 전의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의회 중심 전략이 정세에 적합하다고 주장
- 두 입장은 모순적이지만 같은 결정론적인 오류, 즉 투쟁에 필요한 주체적인 노력에 대한 과소평가라는 한계를 지님. 또한 시리자의 총선 선전과 좌파정부 구성의 의미를 과대평가함
- 반대로 세키니마나 안타르시아에 참여하는 많은 정파는 현 정세를 대체로 혁명 전의 시기에 해당하는 역사적 국면으로 규정하며 그리스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잠재력을 강조. 달리 말하면 현재 그리스 민중의 계급투쟁이 자본주의 체제의 균열로 발전할 가능성을 봄. 이 관점은 시리자와 좌파정부를 상대화하고 대신 조직화나 대중교육을 통해 대중투쟁을 발전시

키는 데에 좌파가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8. 최근 거론되는 위기 대책 검토

1) 현재 상황

- 그리스의 디폴트나 ‘그렉시트’(유로존 이탈)는 유럽 재정위기가 폭발하는 도화선(trigger)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
 - 그리스의 디폴트나 유로존 이탈이 관련 손실 증대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역내 위기국의 동반 이탈 가능성을 부추기면서 광범위한 충격**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
 - * 지난 2월 국제금융협회(IIF)는 그리스가 화폐동맹에서 탈퇴할 시 역내 직접적 손실 규모가 1조 유로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
 - ** 특히 6월 말 유럽 은행권의 자본확충 시한을 앞둔 상황에서 그리스·스페인의뱅크런과 함께 여타 위기국의 디폴트 위험이 재부상
 - EU와 ECB는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희망하면서도 탈퇴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강구
- 최근 유럽연합과 IMF는 정책기조를 일부 수정·보완할 의지를 피력
 -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재정건전화로 촉발된 경기침체, 세수감소 및 정치적 반발 등으로 당초의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 특히 스페인에서는 은행부실 및 재정악화로 구제금융*을 요청
 - * 6월 9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Eurogroup)에서는 스페인 은행 자본확충 용도로 최대 1,0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발표
 - 이와 함께 유로존의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증대
 - 한편 재정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긴축재정을 강도높게 추진했던 영국 경제가 최근 더블딥에 빠지면서 긴축재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제기되는 상황
 - * 올해 들어 IMF는 중기 부채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산출과 고용에서 적절한 성장을 지원하는 속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 경기조정수지 적자의 추가적인 감소는 성장관점 뿐만 아니라 시장관점에서도 역시 긍정적이지 않다는 이유
- 그러나 (그리스 2차 총선의 영향을 차치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유로존의 위기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그리스의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디폴트 가능성과 유로존 탈퇴 가능성은 계속해서 상존
 - 이와 관련하여 최근 트로이카에서 산발적으로 제기되는 위기 대책들을 아래에서 검토

2) 위기 대책 검토

- 위기관리기구 강화
 - 유럽 재정위기가 이탈리아, 스페인 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높아지면서 EFSF/ESM과 같은 위기관리기구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 그러나 다음 제약요인이 존재

- 가용자금 부족: 현재 EFSF/ESM의 지원여력(7,000억 유로)는 위기 확산에 대처하기에는 미흡. 이에 가용대출 규모를 1조 유로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독일이 반대
- 정책여건 미비: ECB가 최종대부자 가능 등을 통해 금융안정기능을 적극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레버리지 확대를 위해 ESM에 은행기능을 부여하고 ECB 대출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은 EU 조약(no-bailout)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독일이 반대
- 역효과: EFSF/ESM이 회원국 정부를 거치지 않고 자본확충이 필요한 회원국 은행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이럴 경우 독일은 취약국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할 것을 우려할 것

○ 유일한 방화벽으로서 ECB의 적극적 금융 안정 기능 수행

- 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EFSF/ESM 규모 확충이 회원국간 의견대립, 채권발행의 어려움, ESM 자본금 납입에 따른 회원국 재정부담 등으로 조기에 실현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ECB가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하여 국채매입을 대폭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 그러나 독일 등은 ECB가 긴급 유동성공급 범위를 넘어 위기국의 국채매입을 대규모로 확대하거나 EFSF 레버리지 지원에 나설 경우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구분이 모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 독일연방은행은 ECB의 국채매입이 화폐발행을 통한 재정적자 보전과 사실상 동일하므로, 이는 EU 조약 위반에 해당하며 결국 각국 정부가 재정규율을 준수할 인센티브를 손상시킬 것이라는 비판적 입장을 고수

쟁 점	
독일 비판론	독일연방은행의 반론
재정규율 강화 연기	
<p>“유로존 재정규율 강화와 구조개혁이 경기회복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p>	<p>“ ‘정상적인 상황’ 에서 재정규율 강화는 총수요와 경제성장을 위축시키는 것이 맞지만, 지금이 정상적인 상황인 지에 대해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p> <p>“단기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불가피하겠지만, 규율 강화를 통해 지속불가능한 현 상황이 시정되고 효율성이 제고되면 장기적인 이득이 단기적인 고통보다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위기 원인의 치유능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짐으로써 단기적인 고통도 완화될 수 있다.”</p>
유로지역 거시경제 불균형 완화의 주체	
<p>“유로존 위기의 중심에는 경상수지 불균형이 존재하며, 유로화 단일체제에서는 환율조정이 불가능하므로 독일과 같은 흑자국가가 부담을 일부 떠맡아야 한다.”</p>	<p>“모든 국가의 경상수지 흑자는 불가능하지만,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력 확충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는 가능하다.”</p> <p>“독일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유로지역 주변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독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뢰도 약화, 자금조달 비용 상승, 방화벽(EFSF/ESM)의 수용능력 축소 등을 통해 주변국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p>
통화정책의 위기대응 역할 확대	
<p>“유로시스템, 즉 ECB와 회원국 중앙은행이 추가적인</p>	<p>“유로시스템이 건전하지 않거나 부적격 담보를 제공</p>

<p>기준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및 자산매입 확대 등을 통해 위기관리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p>	<p>하는 은행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리스크를 서로 다른 회원국의 납세자에게 재분배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러한 재분배는 각국 의회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p> <p>“물가안정이라는 최우선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중앙은행이 보유한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신뢰’ 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만큼, 통화정책은 ‘유로지역 전체의 물가안정’ 이라는 관점을 잃지 말아야 한다.”</p>
---	---

<표> 유로지역 위기 해결방안에 대한 독일연방은행의 최근 견해

○ 성장협약 체결

- 재정규율 강화를 요체로 2012년 3월 체결된 신재정협약이 경기침체를 심화시켜 오히려 재정건전화 목표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미래 유로존에 대한 정치적 비전 제시 ▲구조개혁 추진(상품·노동시장 개혁, 단일시장 완성, 경쟁 촉진) ▲공공투자 확대(인프라, 인적자본, 연구개발 등) 등을 요체로 하는 성장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 이러한 방안에 대해 독일, 프랑스 등 핵심국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핵심국은 노동시장 개혁에, 주변국은 대규모 투자에 정책적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커서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농후함
- 또 성장협약 시행에 소요될 자금 마련 방안을 둘러싸고 회원국 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도 큼

○ 유로본드 발행

- 유로본드는 회원국 국채를 대체하여 회원국 공동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재정위기 해결책의 하나로 거론되다가 2011.11월 EU집행위원회가 정책제안서를 발표하면서 공론화
- 그러나 독일 등 고신용국이 그리스 등 저신용국의 신용리스크 전이를 우려하면서 도입을 반대*하는 상황
- * 6월 3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유럽 국가들이 예산 관련 주권을 유럽연합(EU)에 이양한다면 독일이 유로본드 및 유럽 은행들에 대한 공동지원 등을 허용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 그러나 독일 메르켈 총리는 여전히 ‘어떠한 경우에도 유로본드 구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2일 기독교민주당(CDU) 연설)
- 현실적으로, EU 통치구조를 전반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은 채 유로본드를 도입하는 것은 단지 더 매력적인 금융투자처를 제공하고 독일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이라는 평가도 있음

○ 유럽채무상환협약 체결

- 유로본드 도입이 쉽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유럽채무상환협약 체결 및 기금(European Redemption Fund) 설립을 제안
- 이에 따르면 회원국의 국가채무 중 GDP 대비 60% 초과부분을 신설 채무상환기금으로 이관되 동 기금은 회원국 연대보증 하에 발행된 안전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활용하여 회원국으로부터 이관된 채무를 상환하게 됨(회원국은 20-25년에 걸쳐 채무 상환)
- 이 제안에 대해 EU 기구(집행위원회, 의회) 내에서도 지지가 확산되고 독일 내 주요 야당(사민당, 녹색당)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
- 그러나 유럽채무상환기금의 도입은 사실상 공동보증에 의한 유로본드 발행과 동일한 것이므로 실현 여부가 불확실

- 유럽채무상환기금 도입은 재정위기국에는 자금조달 비용이 하락하는 편익이 있는 반면 독일에는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는 불이익이 있음
- 그밖에도 채무상환기금이 도입되면 회원국의 재정을 감시하고 재정건전화 추진을 강요할 수 있는 만큼 회원국이 주권/내정간섭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 방안의 합의 및 비준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

○ 금융동맹 결성

- 재정동맹없는 화폐동맹으로서 유로존 체제가 갖는 결함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그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금융동맹(banking union) 결성 필요성이 ECB, IMF 등으로부터 제기*
 - * 최근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스페인 방키아를 비롯한 유로존 은행 위기 해결의 책임은 ECB가 아닌, 유로존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오는 7월 출범하는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은행 직접 지원을 제안. 하지만 독일 메르켈 총리는 이는 EU 조약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반대
- 금융동맹은 ▲유럽은행감독청(EBA)이 EU 전역의 단일한 은행 감독기구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ECB가 유럽은행체계에 대한 최종대부자 기능을 관할하고 ▲부실은행 안정을 위해 유럽예금보험 및 은행구조조정기구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예금보험기구와 관련해서는 EU에서 설립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 하지만 주요 회원국이 은행감독권을 EU 기구에 이양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고 있음(독일은 지역 은행부문과 지역정치의 밀착관계 유지를 위해, 프랑스는 경제적 주권 유지를 위해 자국 감독체제를 선호)
- 또 은행 감독권을 유로존에 한정할 것인지 EU 전체로 확대할 것인지도 중요 쟁점(비유로존 EU 회원국인 영국은 유럽의 금융허브로서 은행감독 주권 침해를 용인하지 않음)
- 금융동맹이 결성된다 하더라도 특정국이 자국 국채를 과다 보유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으며, 반대로 과다채무국이 자국 은행에 국채매입 압력을 행사하는 것도 발생할 수 있음
- 근본적으로, 금융동맹은 금융리스크 분담 또는 국가간 재정이전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유로 회원국간 이견과 갈등의 소지를 내포

○ 요컨대, 현재 유로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여러 대책이 거론되고 있지만 유로존의 구조적 제약 및 회원국간 정치적·경제적 이질성으로 인해 실행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정책제안들은 대부분 단기간 내 실행되기 어려워, 유럽의 위기 대응은 여전히 '그럭저럭 버티면서 시간을 버는'(muddling through)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큼
- 유로존 위기의 구조적 해결책이 제시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일부 개선 조치가 도입되더라도 그 실효성은 지극히 낮을 것
- 따라서 이번 총선 결과 당장 그렉시트 사태가 가시화되지는 않더라도, 그리스의 경제 회복 및 재정위기 극복 가능성이 높지 않고 또 위기가 스페인, 이탈리아로 확산됨에 따라 머지않은 장래에 일부 국가의 유로존 탈퇴는 불가피할 전망

9. 시사점

1) 그리스 민중들의 투쟁에 대한 국제적 연대

- 그리스는 신자유주의적 유럽 통합의 모순과 경제위기의 폐해가 가장 극심히 드러나는 지역
- 이곳에서 진행되는 민중들의 투쟁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의 최전선에 있음. 아직 완성형은 아니지만,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의 사회운동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구체적·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고 발전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함
- 따라서 한국의 사회운동도 그리스 민중들의 계급투쟁에 지지와 연대의 뜻을 포함으로써 국제적인 반신자유주의-반자본주의 물결에 동참하고 국제적·국내적 대안을 적극 모색해야 함

2) 대중투쟁과 선거운동의 관계

- 그리스 민중의 2년에 걸친 대중적 투쟁이 없었다면, 시리자가 5월 1차 총선에서 2위를 차지하지는 못했을 것. 시리자를 비롯한 그리스 좌파 세력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며 지속적인 조직화와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시리자가 2차 총선에서 1당이 되더라도 그것이 바로 긴축정책 중단, 경제위기 탈출과 그리스 사회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 어떤 정부가 수립되더라도 노동자와 대중의 투쟁이 이어지고 강화되어야 함. 그래야 그리스가 트로이카의 긴축명령을 거부하고 인간 중심의 사회를 건설할 기회가 생길 것.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시기에 아래로부터의 조직화와 현장 중심의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
- 이러한 사례를 참고할 때, 한국의 진보정당과 민중운동 주류가 지난 총선에서 선거에 매몰되며 투쟁을 방기한 결과 현재 총과업을 추진할 동력을 많이 상실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한국 노동자운동의 대중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함

3) 민족국가적 대안과 국제적 대안의 결합

- 유럽의 위기는 유럽 통합의 신자유주의적 본질과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문제이므로 그 해법 역시 민족국가적 차원에 국한될 수 없음
- 현재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사회운동은 유럽 위기에 대한 국내적 대안과 유럽 차원의 대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있음. 그러나 유럽 사회운동은 아직 국제적 차원에서 세력 관계를 역전할 수 있는 현실적 힘을 구축하지는 못하고 있음
- 유럽 차원에서 볼 때, 구 공산당 계열이 주축을 이루는 유럽좌파당, 트로츠키주의(제4인터내셔널, 국제사회주의 등) 계열의 좌파들, 유럽사회포럼-아탁 등의 (비정당적) 사회운동 세력은 긴축반대를 공통분모로 삼고 있으나 '또 다른 유럽'의 구체적 전망을 공동으로 수립하지는 못하고 있음
- 유럽의 위기가 계속 심화·확산되며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초민족적 차원의 대안 및 세력 형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지역적으로 구체화·특수화한 두 가지 사례가 바로 유럽연합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 구상.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 구상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을 추진 중. 한국 사회운동은 유럽의 사례로부터 신자유주의적 지역화에 맞서는 교훈을 간접적으로 추출할 수 있어야. 특히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 구상이 한미일 정치·군사동맹의 강화를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운동은 평화주의와 결합해야 함

*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은 무역 및 금융의 자유화를 추진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전자가 화폐동맹을 통해 '폐쇄적' 지역화를 추구하는 반면 후자는 공동의 경제정책을 채택하지 않는 '개방적' 지역화를 추구한다는 차이점이 있음

4) 경제위기에 대비한 정치적·조직적 태세의 구축

- 2007-09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진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의 재정위기가 심화·확산되면서 세계 경제가 다시 한 번 대대적인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커짐
- 무역의존도와 금융개방도가 높은 한국은 세계 경제위기에 대단히 취약할 수밖에 없음. 전통적으로 수출을 주도했던 철강·자동차·조선·기계·석유화학·정보통신 등 주력산업 분야에서 올해 들어 이미 위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가계부채 급증도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음
- 정부와 경제·금융 당국은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중기 재정건전화 기조 하에 최근 사회보장·복지의 추가적인 조정을 예고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한국 경제의 활로를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에서 찾으며 계속해서 자유무역협정 전략과 노동신축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음
- 한국의 사회운동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정부의 재정건전화 기조나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 기조의 반민중적 성격*을 폭로하면서 생존권·노동권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함. 이런 점에서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은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밖에 없음. 무엇보다 노동자계급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해야 할 민주노총의 조직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

* 1997-98년 외환위기·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수출-재벌 중심의 세계화는 평가절하나 노동신축화와 같은 '내부적 평가절하'를 바탕으로 함. 즉 노동자에게는 저임금·장시간·고강도 노동의 악순환을 의미. 특히 2008년 위기 이후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철저히 억압(지난 4년간 실질임금 마이너스 성장 3년)

- 또한 한국에서도 그리스와 유사하게 특히 경제위기 하에서 이주자에 대한 극단적 폭력과 외국인혐오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리스 좌파들이 다양한 쟁점에 대해 이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은, 민족주의·인종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 한국의 사회운동도 경제위기 하에서 언제든 민족주의·인종주의와 같은 보수주의적 반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시작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함